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2016. 02. 01 | 최정은_새사연 상임연구원 | jechoi@saesayon.org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정책 중 하나이지만, 재정 갈등과 해결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무상보육을 놓고 엇치락뒤치락 해 온 지난 3년동안 한국 복지의 민낯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2016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가 책임 보육’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살얼음판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당과 야당,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3~5세 공통교육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과 고래 싸움에 노심초사하며 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학부모와 아이들, 예산이 없어 임금도 받지 못하는 교사들, 지원이 중단되면서 존폐위기에 처한 어린이집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아래로부터 요구 받은 보편복지가 한국에 뿌리내린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10년 6.2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복지의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었다. 여당과 야당은 보편복지 공약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으로 맞불 선거를 치를 정도로, 국민 다수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하겠다던 복지마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지금 온 국민이 내 자식과 손주, 이웃의 문제로 복지 갈등을 지켜보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렵게 진전시킨 보편복지의 경험이 지난 3년간 한 발도 내딛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복지 확산에 대한 우려는 동시에 커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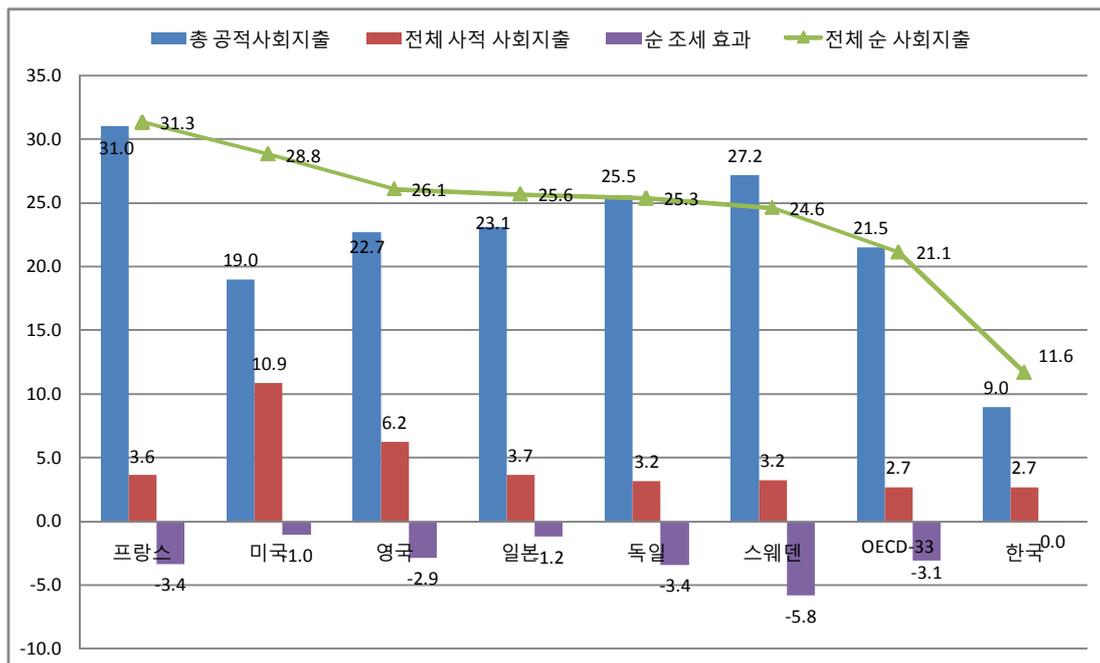
아버지가 못다 이룬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겠다며 당선된 박근혜정부는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무상 복지’를 전면내세워 당선된 것도 이례적인데다, 준비 없는 복지에 대한 걱정도 컸다. 기존 우려대로 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은 ‘불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약마저 후퇴하면서 거센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 과세’ 문제에 주목

박근혜정부가 2%대 저성장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복지공약은 하나 같이 재정복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경제 위기에 복지가 주춤거리는 과정이 존재 했으나, 장기침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빈곤 및 질병,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가족, 노인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히 복지 투자에 나서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무상보육만으로 국가 재정이 흔들릴 만큼 한국의 복지지출이 과도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OECD 33개국 평균 공적사회지출은 GDP 대비 21.5%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9.0%에 불과해 OECD와의 공적사회지출 격차는 12.5%p나 벌어진다. 한국의 사적사회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같고, 순 조세효과는 0%이면서 한국의 총 순 사회지출은 11.6% 정도다. 최근 가족복지에 적극 나선 프랑스는 우리와는 정반대로 총 공적사회지출은 31%로 최상위권이며, 사적사회지출은 3.6%에 조세 효과를 더해 31.3%로 단연 최고다. 한편, 미국은 총 공적사회지출이 19%로 높지 않지만, 사적지출이 10.9%로 높은데다 과세효과까지 더해져 전체 사회지출은 28.8%에 이른다(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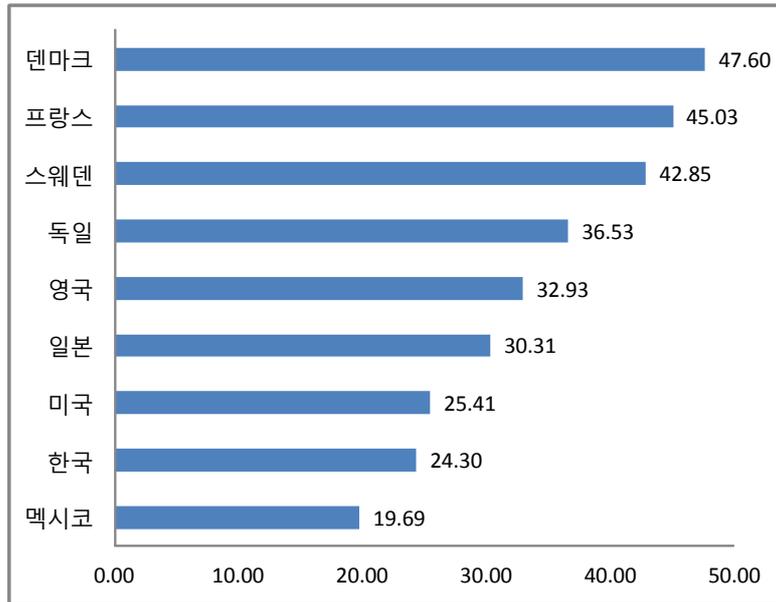
그림1. OECD 주요국의 공적사회지출 비교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2014.

이렇게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데는 개인의 조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4.3%로, 덴마크 47.6%, 프랑스 45.3%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니 돌려받는 복지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뒤따른다(그림2 참조).

그림2. OECD 주요국의 조세부담율(GDP 대비 %, 2013)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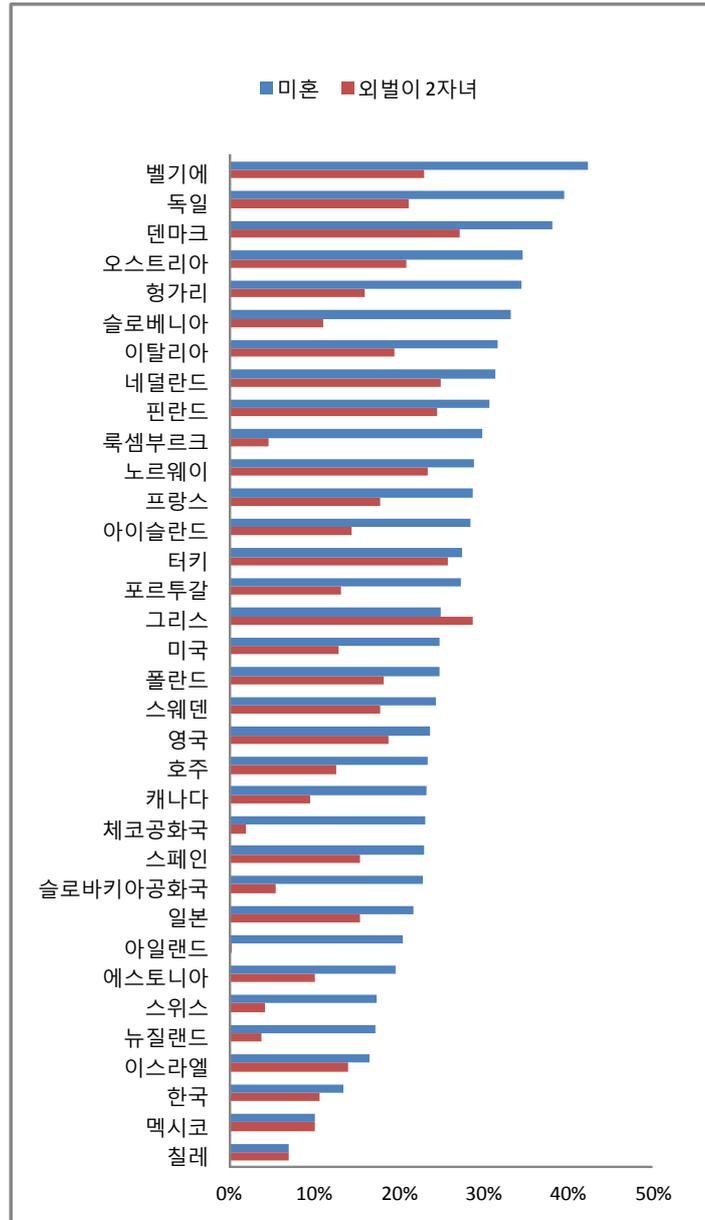
물론 이 같은 인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자체의 문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큰 데 반해, 우리는 임금과 과세의 상관성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단적으로 미혼 임금자와 외벌이 2자녀 가족의 임금과세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이 두 사례 간 과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선진국에서는 이에 따른 과세 차이가 크다.¹⁾ 한국은 미혼과 외벌이 2자녀의 경우 임금 과세 차이가 13%와 11%로 2%p 정도에 그치지만, 독일은 각각 40%와 21%로 19%p로 큰 차이를 두고 있다(그림3 참조).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조세 체계에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에 전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주식 등 비과세 부분이 많아 상위 1~10%가 전체 부의 상당을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소득 하위와의 격차도 심해져 부의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 OECD Taxing Wages 2015.

그림3. OECD 미혼과 외벌이2자녀 임금과세 비교



자료: OECD Taxing Wages 2015.

최근 OECD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약화시킨다는 보고서²⁾를 냈다. 한국 사회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독이 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1980년대 OECD 국가들의 소득상위 10%와 소득하위 10% 간의 격차는 평균 7배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소득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소득상위 1%가 전체 부의 18%를 점유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당장에는 저소득층이 소득 불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전체가 손실을 입을 것이다. OECD 19개국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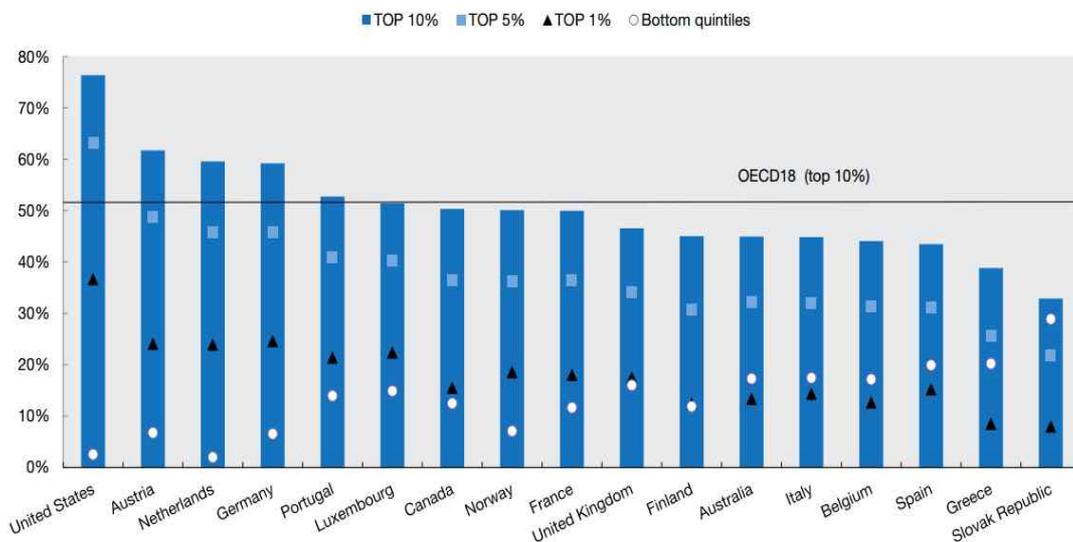
2) Keeley, B.(2015).

사한 결과, 1985년~2005년 동안 악화된 불평등이 1990년~2010년 누적 성장을 4.7%p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OECD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소득, 부,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포괄적인 성장정책을 펼 것을 주문한다. 이 방안으로 노동시장에서 젠더 불평등을 개선하고, 전체 고용의 1/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정책을 펴고, 모든 영유아의 균등한 출발을 위해 초기 교육에 투자하고, 소득과 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조세와 공적이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주문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을 보면, 소득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많다. 미국은 상위10%가 전체 부의 75%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상위1%가 전체 부의 40% 가까이를 지배하고 있다(그림4 참조).

그림4. OECD 주요국 고소득의 부 편중



자료: Fabrice Murtin and Marco Mira d' Ercole(2015).

최근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다. 김낙년(2015년)³⁾ 연구에서는 우리 성인 인구 중 자산 상위1%는 2010년~2013년에 전체 자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1%를 차지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이는 미국과 영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 등 유럽 대륙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치다.

한국 복지가 예전보다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재분배 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자료로 조세와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를 비교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이 효과가 시장소득 대비 30%로 나타난 반면,

3) 김낙년, 2015.10.

한국은 그 효과가 10% 내외에 머물러 있다.⁴⁾ 여전히 협소한 한국 복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는 ‘축소 , 폐기’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한국형 복지 모델로 내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는 얼마나 실현되었고,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나? 18대 대선공약, 인수위에서 채택한 국정과제 그리고 집권 3년간 실행과정을 비교하면, 박근혜정부 복지는 대선 공약보다 축소 혹은 아예 폐기되면서 ‘선별복지’ 와 ‘재정복지’ 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은 지켜지지 않으면서 ‘확실한 국가기피 보육’ 이 되었다. 대선공약은 만0~2세 영아와 만3~5세 유아 누리과정 보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안이었다. 여기에는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연차적으로 올려 올해 30만원으로 현실화해 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아 보육료지원은 기존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누리과정은 지난해까지 연차적으로 지자체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어와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교부금 여력도 바닥을 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가 과부담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사업을 책임지기보다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맞춤형 보육’ 은 그야말로 다양한 보육의 수요에 맞게 영아 돌봄서비스 확대와 기관 내 시간제 보육체계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재정 맞춤형’ 보육시스템으로 바뀌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전업맘과 직장맘 간 어린이집 사용시간을 차별화하고, 전업맘의 시설 이용지원비도 줄이는 안이다. 정부는 이용이 불편했던 직장맘의 수요를 중심으로 이용시간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맘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노동시간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시간, 장시간 노동을 감내할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문제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근본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무상보육을 후퇴시키고, 전업맘과 직장맘 간 다툼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초등 온종일 돌봄’ 은 ‘무늬만 온종일 돌봄’ 으로 불만을 사고 있다. 초등 온종일 돌봄 정책이 나왔을 때, 저녁 10시까지 학교 돌봄이 아이들에게 인권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녁 10시까지 돌봄은커녕, 오후

4) 이병희 · 강병구 · 성재민 · 홍민기, 2015.12.

돌봄도 원하는 모든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게다가 초3~6학년 고학년 돌봄을 시행하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시작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를 위한 아동 돌봄도 학교 안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은 양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제약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 안에서의 돌봄 공약은 30~40대 부모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지금은 거짓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누리과정뿐 아니라 학교 돌봄교실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교육부에서 초등 고학년 돌봄 계획을 발표했으나,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또 다시 교육청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은 아예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많은 공약들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났다. 반면 성남시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⁵⁾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간 학부모의 교육 부담이 컸던 교복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구상되었다. 성남시 내 인력과 자재로만 교복을 생산하고, 영세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기업이 독점하던 관행까지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소득하위 80%까지 반값등록금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약속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들에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그친 상태다.⁶⁾ 저소득 대학생의 등록금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에 유보금만 쌓아놓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학교 운영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반값등록금 현실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는 4대중증질환에 대해 급여 부분 뿐 아니라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부담률과 환자 부담비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비급여 부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의료 공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⁷⁾

또한 박근혜정부는 실현가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65세 어르신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월 20만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고령 유권자들의 몰표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전개과정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은 소득하위 70%로 재조정되고, 국민연금과 연동되면서 오히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를 소외시키는 정책으로 논란을 키웠다.⁸⁾ 기초연금이 물가와 연동됨에 따라 그 인상폭도 더디게 진행돼 원래 의도했던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은 생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5) <한겨레> 2016.1.25.

6) 임희성·김삼호, 2016.1.20.

7) <국민일보> 2015.12.7.

8) <프레시안> 2015.12.30.

자살하는 노인 비율이 세계 최고이며, 노인 빈곤 속도도 가장 빠르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해 올리는 방안이나, 어르신들의 소득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송파 세 모녀 사태’ 로 긴급지원 법안이 발의되기로 했으나, 우리 사회 저변에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혜택 범위와 수준을 가로막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정산 기준 등이 바뀌어야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으나 이 장벽은 여전히 높다.⁹⁾

표1. 박근혜정부 대선공약과 집권 3년간 정책 평가

항목	대선 공약	집권 3년 평가
복지 기초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영유아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0~2세 영아 보육료 전액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 확실한 국가기피 보육 ○ 교육부 교부금 통해 누리과정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부담 급증 ○ 국가사업으로 예산 배정 의지와 책임 회피해 매년 갈등 증폭
	맞춤형 보육 시스템 ○ 수요자맞춤형, 영아종일제돌봄확대, 시간제보육 확대	→ 재정 맞춤형으로 이용시간 차별화 ○ 종일반 12시간, 전업맘 7시간 보육으로 재편
아동	초등 온종일 돌봄 ○ 오후 5시까지 책임, 급식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오후10시까지 연장 ○ '14년 1~2학년→ '15년 3~4학년→ '16년 5~6학년 확대	→ 3~6학년 돌봄 사각지대 ○ '14년 초 1~2학년 수요에 맞춰 확대, '15년 예산 배정 없어 축소 ○ 돌봄비, 급식 부모 부담 ○ 3~6학년 돌봄 교실과 교사 예산 지원 없어
청소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 ○ '14년 25%씩 확대해 '17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	→ 미시행
청년	반값등록금 실천 ○ 소득 8분위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경감	→ 저소득층 일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1, 2분위 지원, 전액 지원은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대출금도 같이 증가 ○ 학내 유보금, 등록금 의존율 높은 대학 구조로 등록금 인하 어려워

9) <프레시안> 2014.8.18.



어르신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비급여 진료비까지 건강보험으로 추진 ○ 현 75% 수준 4대중증질환 보장률 '16년까지 100%로 확대	→ 4대중증질환 진료 개인부담 증가 ○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이 77% 내외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 본인부담비율이 개선되지 않음. 비급여 부분도 역시 높고 있어 ○ 수술 이외의 재활 등 본인 부담금 줄지 않아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 기초연금 소득별 차등지원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 연동해 혜택 수준 낮춰 ○ 물가와 연동해 인상 속도 늦춰져 ○ 사실상 낮은 급여와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시정해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 현행 통합급여체계에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 선정 기준 및 내용 차별화 ○ 부양자의무자 범위 검토, 비수급 빈곤층 수급 확대	→ 기초생활보장 걸림돌 여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증가하나, 혜택은 쪼개져 ○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 부양의무자와 소득환산 기준 등 근본 변화 없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

자료: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201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갈등과 분열’ 의 복지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저항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재정 준비나 합의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이었음을 지난 3년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 공약 책임을 재정 탓으로 돌리거나, 개인의 부담이나 지방정부의 몫으로 떠넘기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특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투자로서 선진국에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늘려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는 3년 내내 복지 예산 책임 공방이 계속되었다. 영유아 관련 복지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의 매칭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통령이 공약했다라도 이에 합당한 국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행할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는 우회지원으로 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이 계속

되었다. 매해 반복되는 갈등을 멈추기 위해 근본 대안을 세우자는 논의를 수차례 이어왔으나, 정부는 공약을 지자체의 의무사업으로 규정하는 법을 바꾸면서 계속 지자체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결국 사회 여러 주체들이 자원들을 모아 사회에 필요한 복지를 나눠 맡는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한국형 복지는 선별복지로, 복지 혜택에 따라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분열과 갈등만 남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맞춤형 보육으로 설계하면서 전업맘과 직장맘의 이용시간을 차별화해 편 가르기를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둘러싸고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 간 충돌을 야기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동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혜택 범위가 달라 참여한 갈등을 만들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비를 편성하지 못하면서 정책 간 부딪침이 일었다. 게다가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한 지자체에 예비비를 먼저 주면서 지방자치를 후퇴시켰으며, 지자체 간 갈등도 불러왔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생애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보다는 삶의 썩썩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재정적인 제약 안에서 한국형 복지는 오히려 곳곳에 싸움의 불씨를 남기며 분열과 갈등을 만들기까지 했다.

나열식 사업 벗어나 근본 문제 대응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타던 80~90년대에 복지체계는 임금노동 중심의 제도라는 제약에 크게 부딪히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도 고실업과 노동유연화의 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해 기존의 협소한 복지제도 한계도 바닥을 드러냈다. 실업, 질병, 고령 이외에도 임금노동 밖의 사회 구성원이 급증했다.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 까지 등장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대응이 절실하다.

‘한국이 어떤 복지국가로 발전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진행 중이다. 사회안 전망이 탄탄한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의 효과를 기대하며, 영미식 최소복지와 독일 등지에서의 근로와 연계된 복지의 경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정부와 시장, 시민이 협력해 제3의 영역으로 부상한 사회경제체를 통해 복지 생태계를 만들려는 실험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노력들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

장 바꾸고 싶은 조건이 스펙과 부모의 경제력이라고 한다. 청년들의 2/3가 취업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밝히고 있다.¹⁰⁾ 개인의 학벌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세대의 스펙과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뜨거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도 부모의 부가 자녀의 취업과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어렵다면, 내수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부족하고, 가계부채는 쌓여가고, 부의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운데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불평등의 재생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복지 재원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세입과 세출을 쥐어짜면서 사회 곳곳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법인세 감면은 계속되면서 저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만 올리는 것으로는 방대한 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

한국형 복지는 돈을 쓰는 만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 한계를 안고 있다. 고용과 복지 견인을 기대하는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의료민영화로 개인 의료비 부담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와 저임금의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만연한 노동시장 이중화까지 사회 각계 각층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공적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기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10) <한겨레> 2016.1.12.

[참고자료]

- 김낙년,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2015.10.
 이병희·강병구·성재민·홍민기,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2015.12.
 임희성·김삼호, “교육부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그 진실은?“, 대학교육연구소, 2016.1.20.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201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Fabrice Murtin and Marco Mira d' Ercole, *Household wealth inequality across OECD countries: new OECD evidence*, OECD statistics brief, 2015.
 Keeley, B.,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OECD Insights, OECD Publishing, Paris 2015.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OECD Social Expenditure 2014.
 OECD Taxing Wages 2015.
 <국민일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아직은 멀다, 2015.12.7.
 <프레시안>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2015.12.30.
 _____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2014.8.18.
 <한겨레>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너는 스펙 쌓을때 난 알바...부모경제력이 취업 가르다, 2016.1.12.
 _____ 성남시 무상교복, 단순 복지 넘어 사회적 경제의 의미 주목해야, 2016.1.25.

2016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12일	고용·노동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1월 15일	부동산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1월 18일	정치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 2016년 정치전망과 야권의 과제	손우정
1월 25일	농업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과 '소득'에 있다	장경호
1월 28일	주거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2월 1일	복지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2월 5일	청년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12일	미디어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18일	종합	추후 공개	추후 공개